

공정거래협회, 2003년 정기총회 및 강연회 개최

본 협회는 2월 25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한국공정거래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2003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임원 선임(안), 회원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정기총회 안건 중 일반회원을 기업회원으로, 특별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회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거래연구원」을 「경쟁제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임원에 비상근 부회장을 신설하고, 감사의 수를 2인에서 2인 이내로,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였다.

한편 강연회에서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새정부의 대기업집단 정책방향』 주제에서 새정부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강조해 오고 있는 「경제시스템 개혁」,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은 바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의미한다며, 우리의 경우 개별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기업집단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규 독점국장은 향후 공정위 업무가 선진국과 같이 카르텔, 독점, 기업결합심사가 주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카르텔(담합)의 차단을 위해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과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관행과 제도를 종합 정비하고 제2차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과 관련하여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조사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계열



금융회사가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강화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키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작업단을 구성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거미줄식 출자를 매트릭스 형태의 공개를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반경쟁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을 권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공정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으로 에너지(전력), 금융(은행, 할부금융), 유통(인터넷 쇼핑몰), 건설(주상복합건물공사), 기타서비스(광고), 사업서비스(전문자격사) 6개 산업부문과 청소년(마일리지카드), 부녀자(여성의류, 먹는샘물), 영세상인(자판기), 도시서민(자사브랜드제품), 자가운전자(자동차수리, 대여), 학생(프린트 소모품) 등 6개 소비자그룹의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질의 및 응답

▶ 질의

공정거래상담사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 응답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되며, 공정거래상담사자격제도는 순수 민간 자격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상담사는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팀에 소속된 인력이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의 활동을 넓힐 수 있고, 대학생 중 소정의 전문지식을 소유 하였다면 입사 및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민간자격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차후 정부의 협력이 있으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발간 안내

기업의 실무자, 법조계 및 학계 등 공정거래 전문가들을 위한 유익한 길잡이

본 협회에서는 2003년 3월 28일 한국, 미국, EU, 일본 등의 공정거래 심결사례를 심층 분석한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를 발간하였다.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는 공정거래 사건 중 당사자간의 논란이 심했거나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많았던 사례를 법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리하여, 미국, EU, 일본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한 핵심원리와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본 서는 공정위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번역하여 당사자간의 대립되는 주장, 쟁점에 대한 경쟁당국 및 법원의 판단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심결서(판결문 포함)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목 차

- 제1장 독점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2장 기업결합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3장 공동행위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4장 불공정거래 관련 심결사례 비교
- 제5장 적용제외 관련 심결사례 비교

부록

- I. 주요국의 경쟁법 관련 조문
- II. 국내사례 심·판결문

628면
정가: 30,000원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준법지원실(☎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정거래관련 법규집』구입 안내

한국공정거래협회는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령·고시·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2002 공정거래관련 법규집』을 발간·배포하였습니다.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구입방법

- 대금을 입금하신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신청서(www.kfta.org 다운로드)를 기재하여 FAX로 송부하여 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 입금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31-04-106356
국민은행 815-01-0378-871
외환은행 064-22-00366-3
- 예금주 : 한국공정거래협회

□ 판매가격

- 회원가 : 4만원
- 비회원가 : 5만원

□ 수록내용(양장 걸표지 1040면-법규집목차 참조)

-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고시·지침 등 제/개정 사항
- 공정거래법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고등법원·대법원 판례 등

□ 문의사항

- 공정거래협회 준법지원실 박영문
TEL. 775-8870~2 / FAX. 775-8873,8869

2002년도 공정거래관련 법규집(목차) 안내

I.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 · 지침 등
 - 1) 기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 2)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3)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 4) 공동행위신고자등에대한감면제도운영지침
 - 5) 공동행위심사기준
 -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 7) 공정거래위원회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 8)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 9)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10)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 11)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 12) 기업결합관련시정조치불이행에따른이행강제금부과기준
 - 13) 기업결합의신고요령
 - 14) 기업결합심사기준
 - 15)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 16) 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심사기준
 - 17)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 18)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 21)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관한지침
 - 22)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 23)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24)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심사기준
 - 25)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 26)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 27) 일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 28) 지적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 29) 지주회사관련규정에관한해석지침
 - 30) 지주회사의설립 · 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 31)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 32) 환급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II. 기맹사업법

1. 기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기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III.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 · 지침 등

- 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2) 선금금등지연이자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
- 3)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확인을고시
- 4)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 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6)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지침

IV. 약관규제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 표시 · 광고법

1.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 · 지침 등
 - 1) 광고실증에관한운영지침
 - 2) 보험상품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 3) 부당한표시 ·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4) 비교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 5) 상가등의분양및임대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 6) 소비자피해일괄구제에관한운영지침
 - 7) 수상 · 인증등의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 8)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 9) 임시증지명령에관한운영지침
 - 10)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 11) 정정광고에관한운영지침
 - 12)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3) 주택의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 14) 중요한표시 · 광고사항고시
 - 15) 통신판매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 16) 환경관련표시 · 광고에관한심사지침

VI. 전자상거래법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VII.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VIII.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IX. 카르텔일괄정리법

X. 공정거래위원회운영

1. 공정거래위원회작제
2. 공정거래위원회작제시행규칙
3. 공정거래위원회위임전결규정
4. 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인사관리규정
5.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